

“치매사고 ‘공백’ 메운 일본… 한국도 복층 보험체계 필요”

치매·경도인지장애 10% 시대
재정부담 줄일 ‘보험 모델’ 시급

日 지자체 80곳 ‘복층 보험’ 도입
사각지대 대비 위로금+배상정산

치매 사고의 구제 공백을 ‘보험’으로 메운 일본 지자체들이 지난 2016년 1곳에서 최근 80여곳으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인지증 사회’(치매·경도인지장애 합산 인지장애 인구가 전체의 약 10%에 이르는 상태)를 앞두면서 조례와 단체보험을 결합한 공공·민영 보험 해법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적 사회 과제다. 특히 인지장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에게 민영보험 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치매 정



Chat GPT가 생성한 일본, 한국 치매 민영보험 이미지.

/Chat GPT

책 제도화에 나섰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들은 지난 2016년 최고법원이 치매 간병 가족의 감독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해소와 치매 부양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피해 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고베시는 ‘복층(2층) 구조’로 주목을 받았다. 1층은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대인 사망 최대 3000만엔 ▲후유장해 75만~3000만엔 ▲

입·통원 위로금 15만엔 ▲휴업손실 5만엔 등을 담았다. 대물 피해도 재물손괴 10만엔, 휴업손해 5만엔을 보장한다.

2층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인·대물 합산 한도를 2억엔으로 두고 앞서 지급한 위로금은 정산 시 공제한다. 여기에 실화책임 보상(사고당 1000만엔, 가구당 30만엔)과 가해자 본인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100만엔), 타지역 사고 위로금까지 있어 ‘책임 불명확·소액·간접 피해’의 사각지대를 좁혔다.

일본의 복층구조는 배상책임이 끝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선지급 위로금은 환수하지 않는 설계가 핵심이다. 피해 회복의 속도를 제도가 뒷받침하도록 ‘보험’이 전면에 배치된 셈이다.

보험업계의 약관·상품도 조정됐다. 가족 범위를 재정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졌고 실종조사비·개인배상책임을 묶은 특약, 성년후견인 배상책임 담보 등 생활밀착형 배상 패키지가 뒤따랐다. ‘판결→지자체 제도→약관·상품’이 한 호흡으로 연결되면서 현장 작동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반면 국내의 시간표는 더 촉박하다. 우리나라의 고령·초고령 비중 확대 속에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빠르게 늘고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7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가족에게 귀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책임은 나중에 엄정히 따지더라도 피해 회복은 먼저’라는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내형 해법으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단체보험 도입과 ‘2층(위

로금·배상정산) 구조’ 정착을 제안했다. 1층 위로금은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소액·간접 피해가 많은 치매 사고의 공백을 메우고 2층 배상책임은 법적 책임이 확정될 때 본지급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가입·인수·지급·정산을 보험사에 위탁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유병률과 재정 여건에 맞춰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정부가 표준 모델과 국고보조 등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면 현장 적용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치매 종합정책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치매 사고의 배상책임 사각지대에 대비하기 위해 1층 위로금을 포함한 복층 체계의 구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해당 보험을 사업으로 추진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IPO 도전 삼수’ 케이뱅크, 순익 48% ‘뚝’

3분기 순익 192억… 누적 1034억
기업대출 확대에도 비용 부담 늘어
IPO 재도전 앞두고 체질개선 속도

케이뱅크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1034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1224억원) 대비 15.5% 감소한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13일 실적발표를 통해 3분기 192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해 전년 동기 대비 48.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IT투자확대와 외형 성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일반 관리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수신 잔액은 30조4000억원, 여신 잔액은 17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38.5%, 10.3% 증가했다.

◆ 기업대출 중심 성장

여신잔액은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다.

케이뱅크는 올 9월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공급액 3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1조93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1% 급증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올해 여신 잔액 증가분의 절반이 기업대출에서 발생하며 가계대출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3분기 이자이익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1115억원을 기록했다. 비이자이익



케이뱅크 사옥.

은 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8% 늘었다. 머니마켓펀드(MMF) 등 운용 수익이 증가했고,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 펌뱅크 수수료도 늘었으며 대출 비교 서비스와 플랫폼 광고 수익도 확대됐다.

3분기 연체율은 0.56%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하락했다. 고정이자여신비율은 0.5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은 15.01%를 기록했다. 순이자마진(NIM)은 1.38%다.

3분기 케이뱅크의 평균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33.1%, 신규 취급 비중은 33.9%로 목표 비중(30%)을 웃돌았다.

케이뱅크는 기업대출 확대, 인공지능(AI) 전환, 디지털자산 리더십 강화를 통해 성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난달

업비트와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제휴를 1년 연장했고, 지난 7월에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실천과 디지털자산 혁신, AI 전환을 통해 성장 속도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 IPO 세번째 도전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예비심사 통과후 내년 상반기 코스피 상장이 목표다.

앞서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두차례 상장추진에 나섰다지만 고배를 든 바 있다. 2022년 9월에는 증시 입성을 추진해 약 7조원의 기업가치를 희망했지만, 금리 인상기에 공모주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얼어 붙으면서 공모 절차에 나서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 다시 수요예측에 나섰다가 시장 반응이 좋지 않아 결국 철회했다. 목표 기업가치는 최대 5조3000억원이었다.

업계에서 이번 기업공개(IPO) 추진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적투자자(FI)와 약속한 상장 기한이 내년 7월까지로, 이를 넘기면 FI는 동반 매각청구권이나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LH, 공동주택 온라인 기술자문 확대

장기수선공사 기술자문 추가
총 10개 분야 서비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기존 장기수선공사 기술자문 4개 분야(▲내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교체공사 ▲배관교체공사 ▲옥상 방수공사)에 지하주차장(바닥) 도장공사 등 6개 분야를 추가해 총 10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지 정보와 간단한 시설물 정보를 입력하면 되며, 주요 장기수선공사의 추정공사비, 공사시방서, 유의사항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열린 ‘제9기 SGI 드림파트너스 출범식 및 워크숍’에서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맨 뒷줄 왼쪽 여섯번째)와 봉사단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SGI서울보증

취약계층 교육·주거 지원에 환경까지 SGI서울보증, 사회공헌 ‘전방위 확대’

‘SGI ON’ 바탕 사회공헌 실천 활발
외부기관과 협업, 중소기업 지원도

SGI서울보증이 임직원이 중심이 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지난 2021년 런칭한 사회공헌 브랜드 ‘SGION’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면서 미래세대와 지역사회, 중소기업과 서민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우선 ‘미래세대 성장파트너’로서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의료와 관련해 백혈병, 소아암 환자 등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때 헌혈증서와 가발 제작비를 함께 제공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 및 보육시설 퇴소대학생 등의 장학금·생활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 1억8000만원을 전달했다. SGI서울보증의 해외 거점이 있는 자카르타, 하노이의 현지 초등학교엔 노트북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시 주거안심동행 민관 협력사업에 참여해 공사비와 자재비 1억 5000만원을 후원한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환경개선 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함께하는 나눔 파트너’로서 임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단 ‘SGI 드림파트너스’를 조직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SGI 드림파트너스는 지난 2016년 출범 이후 2024년까지 누계 참여 인원 2219명, 누계 봉사시간 1만1400시간을 기록했다.

올해는 특히 도시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실미도 해변 환경정화, 환경 분야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단원들이 조립한 태양광 랜턴 기부, 업사이클링 카드지갑 제작 등과 같은 비대면 활동도 조화롭게 실천한다. 임직원들도 자전거와 계단 이용, 머그컵과 텀블러 사용 등 일상에서 환경보호 활동으로 모은 포인트와 매칭한 금액을 환경단체에 기부한다.

아울러 ‘동반성장 상생 파트너’로서 다양한 외부 기관과의 협업으로 유망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보증지원 등을 통해 상생의 기업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비전 ‘WITH SGI’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상생 경영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실천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